

與, 고성 속 '1인1표제' 결정 연기... "보완책 고심"에도 여진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관리당원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결정할 중앙위원회 소집을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연기하기로 24일 결정했다. 당내 일각에서 이견이 분출된 만큼 최종 확정을 위한 중앙위의 결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남은 일주일 동안 '대의원제 무력화' 우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당 지도부가 내년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위한 포석을 마련했다는 목소리가 여전한 만큼 '1인1표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1인1표제 도입 등과 관련해 당원과 (당내)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감안해서 어떻게 보완할지 보완책을 좀 더 논의하기 위해 중앙위 소집을 28일에서 12월5일로 연기(하기로) 수정 동의가 됐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당원 1인1표제' 관련 논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고 있다. /뉴스1

'1인1표제' 최종 관문 중앙위 순연... "보완책을 숙제로" 당무위 80명 가운데 48명 참여... 일각서 "보이콧" 시작 친명계 등 공개 반발도 속제... "전국 정당 보완책 담겨"

이날 비공개 오전 당무위에서는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무위 참석자들은 '1인1표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영남권 등 핵심 대표성 및 대의원제 도입 취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공유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대의원제 역사, 영남 및 소의 지역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몇 분이 계셨지만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정 대표)는 당의 큰 변화를 불러오는 거니까 절대 다수가 공감하는 입에도 과정을 잘 관리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다른 한 참석자도 "대의원, 관리당원 표 등가성에 대한 반대는 아무도 하지 않았다"며 "영남권 등을 어떻게 잘 배려할지 논의를 숙성하자는 차원에서 회의를 한 주 더 연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후 당무위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지선 공천물과 1인1표 당헌 개정 등에 대해 수많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절차와 속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대화방을 비롯한 여러 대화방을 살펴도 1인1표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만장일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전라지역에 대한 보완책 등을 (정 대표가) 말씀하셨으므로 1인1표에 대한 보완책을 숙제로 가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

포스(TF)'에서 구체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원 투표에 이어 당무위 투표도 투표를 자체가 낫다며 '1인1표제' 도입에 대한 당내 '비토 여론'이 여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인1표제 등 지난주 진행됐던 당원 의견 수렴 투표율은 16.8%에 그쳤다.

이날 당무위 투표는 총인원 80명 가운데 서면 투표 37명, 현장 투표 11명으로 진행된 가운데 2~3명 가량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무위원 80명 중에 48명만 투표에 참여했다는 건 정 대표 당무에 대한 보이콧 측면

도 강하다"며 "서면도 제출 안 했다는 건 곧 안전을 반대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중앙위 표결이 순연된 것으로 당장의 갈등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한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도 여전히 해결돼야 할 지점으로 꼽힌다. 정 대표 지도부가 공천을 개정을 명분으로 삼아 1인1표제를 도입해 다음 총선 공천권을 가지는 연임을 위한 포석을 마련했다는 시각이다.

친명계도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내년 전당대회 출마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 최측근이자 친명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당원주권은 분명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대의원제) 지역 균형, 전국 정당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당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전략적 보완 장치가 담겨 있다"고 제동을 걸기도 했다.

뉴스1



진도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과 확대 건의

진도군의회(의장 박극례)는 지난 20일 제312회 정례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소득 불안정 등으로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개선 사항을 요구했다.

건의안의 핵심 요구 사항은 ▲90퍼센트 국비와 도비 부담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 완화 ▲사업 대상 지역 확대 ▲전국 확대를 위한 법적, 재정적 기반 마련 등이다.

박극례 진도군의회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다"라며, "정부의 예산 부담 비율을 높이고 대상 지역을 확대해 실질적인 혜택이 전국 농어촌으로 확대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진도군의회는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안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진도/오재명 기자

광주 혁신당·진보당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해야"

조국혁신당 광주시당과 진보당 광주시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공개공청회도 요구했다.

혁신당 광주시당은 24일 "광주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3~4인 중대선거구제를 폭넓게 도입해 대표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넓힌 경험이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2인 선거구제 확대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진보당 광주시당도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단순히 선거 방식 변경을 넘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에 반영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진보"라며 "정치적 다양성 확보와 거대 양당의 기득권 독점 완화를 위해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즉각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정당의 입장은 최근 광주시 자치구 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3명의 구의원을 선출했던 광산구 '라'선거구(비야, 신가, 신창)를 다시 2명으로 환원하는 내용

을 담은 초안을 마련한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진보정당들은 시민사회와 정당,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공청회 개최도 요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년 12월 '자치구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효과와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시범 지역에서 소수 정당 당선자 비율이 전국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한 뒤 '향후 전국적으로 3인 이상 선거구제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은 최근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출범시키며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등을 공동 의제로 채택한 바 있다.

국회에는 기초의회 선거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광역의회 선거를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뉴스1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제18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의료인력과 중증의료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노인인구 26.1%, 장애인 7.52%, 치매환자 4.4% 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22개 시·군 중 17개 군이 의료 취약지로 분류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는 0.2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는 수도권(1.86명)은 물론 서울(3.02명)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수치다.

중증 응급·외상환자의 타 지역 유출률

서삼석 민주 최고위원 "의대 없는 전남... 의료 공백 심각" "17개 군 의료 취약지, 통합국립의대 신설 시급"

은 51.2%로 전국 평균(19.9%)의 두 배가 넘고, 상급종합병원 180분 내 접근률도 53.8%로 전국 평균보다 약 20%p 낮다.

공중보건의 감소와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모성사망비 등 주요 지표 역시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서 최고위원은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며 "30여년 동안 이어진 도민의 요구는 단순한 대학 설립이 아니라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기본권 요구"라고 강조

했다.

현재 전남 통합국립의대는 국립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간의 통합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유사 규모 글로벌 대학 간 통합의 첫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

서 최고위원은 "2027년 개교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100명 이상 배정, 교육부의 '유연한 통합' 특례 적용, 정원 배정 및 예비평가 인준 등 필수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두 캠퍼스에 각각 5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을 설치하는 일도 반

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최고위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부족 지역에 의사를 양성·배치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근거 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직접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 즉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전남의 의료 현실은 절박하다. 최고위에서 의료격차 문제를 제기한 것만 벌써 세 번째"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이 의료불균형 해소와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경현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2025 **장성** 방문의 해

천년고찰 백양사(쌍계루)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

장성군 Jangseong